

### 오피니언

## 월/요/광/장

김배성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지난해 말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및 적응비용'이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인구성장, 소득증가 등의 요인들로 인해 향후 세계가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농산물 가격폭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만 아니라 최근 식량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시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21세기 내에 식량위기가 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다.

사실 불과 2년 전 세계는 이미 국제곡물 가격급등에 따른 식량위기를 겪은 바 있다. 세계 곡물 및 식품가격이 전체 불가산 상승을 주도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상황을 경험하였고, 식량이 부족한 세계 곳곳에서 사회적인 불안 및 폭동이 야기되기도 했었다. 당시 국제곡물 가격의 급등은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을 원재료로 하는 바이오연료(에탄올이나 디젤) 수요의 증대, 세계 인구 증가 및 중국, 인도 등 중상층 확대에 따른 곡물 및 육류 수요 증대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는 호주, 남미 등 곡물 생산국들의 가뭄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부터 촉발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제유가의 급락, 바이오연료 수요감소, 신

흥개도국들의 곡물 수요감소 등 수요 측면 요인으로 인해 국제곡물 가격이 다시 하락 안정되었으나, 최근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제곡물 가격이 다시 서서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식량문제의 핵심인 국제곡물 가격 상승의 요인들과 그 요인들의 향후 변화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유가 상승에

## 세계 식량문제, 우리는 안전한가?

따라 곡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연료 수요는 향후 최소한 5~10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은 딱딱한 산란 목질계 원료를 사용하는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 그 기술이 향후 5~10년 이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원유 대신 태양광, 지열, 목재 펄프, 원자력, 풍력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곡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바이오연료의 수요는 그만큼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식량문제를 야기한 여러 요인 중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가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개도국들의 지속적인 인구성장과 중상층 확대에 따른 곡물수요 증대 문제다. 중국과 인도는 인구 면에서 현재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UN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인구는 2025년 14억4천100만 명까지 증가한다. 다행히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인도인구는 2025년 13억9천500만 명에서 2050년 15억9천200만 명 수준까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막대한 인구와 자원을 앞세워 연평균 경제성장률 10% 내외의 빠

성인 인구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식량부족 문제를 목전에 두고 안전성 논란만 지속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인류와 지구환경의 안전성 문제를 모른 채하고 식량문제만 해결하고자 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필자가 보기에 안전성 문제는 철저한 과학적인 검증과 더불어 사회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식량문제의 유일한 공급부족 요인으로 지적되는 기후변화 문제는 그 요인이 태양의 활동과 음모론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인류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제활동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품종개발, 재배적지 이동, 수자원 관리체계 강화 등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밀, 옥수수, 대두 등 국제곡물을 연간 1천400만 t 내외 수입하고 있고, 식량자급률이 27% 수준에 지나지 않는 대표적인 곡물수입국이다. 세계 식량문제는 우리나라에 여과 없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식량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식량문제에 대한 중장기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 설

### 광주 R&D 특구 지정 지역 발전 기폭제

광주시의 숙원사업인 연구개발(R&D) 특구 지정이 확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대구시·경북도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광주와 대구를 R&D 특구로 지정하는 행정적 준비작업에 착수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공식석상에서 밝힌 발언인 만큼 광주의 R&D 특구 지정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

광주시의 R&D 특구 지정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지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 R&D 특구는 첨단산단과 하남·진곡산단, 장성군 일원 5천200만㎡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조14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15조 341억원, 고용 창출효과는 2만~3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 R&D 특구는 투자규모도 엄청난지나만 아시아문중심도시조성사

업과 결합해 광주가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 그 파급효과는 전남지역에 까지 미칠 것으로 보여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떠오르게 됐다. 이 대통령도 이날 "R&D 특구가 조성되면 소프트웨어 중심지이자 첨단산업단지도 도약하게 된다"며 "일단 시작하고 나면 큰 기업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의 R&D 특구 지정에 대한 기쁨에 마냥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특구 지정이 진정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구지정에 따른 대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고부가가치 사업 선정 등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무늬만 특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도 R&D 특구로 지정돼 양 도시 간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 무관심 우려되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6·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앞으로 4년간 지역 교육을 이끌고갈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교육감과 교육의원 입지자 대부분이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단체장 선거와는 달리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선거 운동에 나선 예비 후보자들이 얼굴 알리기에 나섰으나 낮은 관심과 인지도 등으로 '묻지마' 선거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다음 선거 때부터 폐지되는 교육의원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선거구가 국회의원보다도 넓어 선거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1인8표제도 처리되는 복잡한 지방선거제도 때문에 아예 등록만 해놓고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지방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뽑

게 돼 민선 자치의 새로운 체제를 구성하게 된다. 모두 8개 분야의 대표를 뽑는 복잡한 선거로 선거공보만 해도 수백 쪽에 달하는 등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투표절차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투표의 불성실은 지역 살림은 물론 청소년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선거에 무관심해서는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른 교육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 지연이나 현열을 떠나 후보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현명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

이번 선거는 교육자치의 사실상 첫 출발점이다. 교육자치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것인지 여부는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 無等鼓

스위스 은행들은 지난 300여 년 동안 고객들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왔다. 이른바 '금융 비밀주의'다. 덕분에 국제적인 자금 피난처로 각광받았다.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 최고권력자들의 비자금 관리처로 지목되곤 했다. 국내에서도 전직 대통령과 재벌 회장 등이 이곳에 거액을 은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밀주의의 장벽에 막혀 계좌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밀주의 전통은 17세기부터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 건너온 프랑스 신교도들이 모국 고국을 대상으로 은밀히 은행업을 하며 시작했다는 것이다. 1934년에는 '비밀주의'를 아예 은행법에 명문화했다. 유대인 고객 명단을 달라는 나치 정권의 요구를 거부하기 위함이었다. 비밀계좌를 누설하면 금고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제도까지 도입했다. 비밀보장과 정치적 중립을 고수한 덕에 스위스 은행들은 금성장했다.

세계 부유층의 '안정금고' 역할을 해왔던 스위스 은행의 위상은 2008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경기침체로 각국이 역외 탈세 차단에 나서면서 조세피난처로 지목된 금융기관들이 '공공적'으로 떠오른 것이다. 국제사회가 힘공에 나섰고 마침내 비밀의 문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우리나라 세금탈루자들이 스위스 비밀금고에 숨겨놓은 재산 내역도 공개될 전망이다. 양국 정부가 조세조약에 금융정보 교환 규정을 추가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정보 교환은 세금탈루 의혹자로부터 스위스은행 계좌를 뺏아서 스위스 측에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로만 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역외 탈세를 막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젠 은행왕국 스위스의 비밀주의 전통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 듯하다. 역설적이게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져다준 성과다. /정호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 금융 비밀주의



## 법조 칼럼

이주훈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이다. 한 수녀가 나치군의 공격에 부상당한 연합군 군사를 차 안에 숨겨 국경을 통과하던 중 독일군의 검문을 받게 되었다.

독일 병사가 물었다. "차 안에 유대인이나 연합군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수녀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녀는 이내 넓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그러자 독일 병사도 웃음을 지으며 수녀가 탄 차를 통과시켜주었다.

필자가 "수녀는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평하던 혹자는 수녀의 말은 거짓말

증언해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은 gaps는 먼저 시비를 건 취객이 패심하기도 하고 시비에 휘말린 친구의 처지가 안타깝기도 한마음에 "취객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친구는 이를 피하기만 하였는데, 취객이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는 주위 상태에서 조사받느라 잘못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다른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재판부는 gaps의 증언을 바탕으로 친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정전 당시 귀중한 생명을 구한 수녀의 '하얀' 거짓말과 친구에게 불리한

### 위증은 범치국가 국민의 수치

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말의 의도나 결과 면에서 보면 수녀는 거짓말을 한 셈이다.

수녀는 독일 병사가 차 안에 아무도 숨기고 있지 않다고 믿고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위와 같은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독일 병사는 차 안에 연합군이나 유대인은 없다고 믿었다. 결국, 수녀는 통째로 독일병사를 속인 것이다. 지혜로운 수녀의 재치 있는 거짓말에 '탁'하고 첩로 부름을 치게 된다.

만일 이야기의 무대를 수사기관이나 법정으로 옮겨보면 어떨까? gaps는 친구와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취객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취객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난 친구가 주먹을 날려 취객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다.

친구와 함께 경찰서에 동행한 gaps는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gaps는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였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주임 검사는 '쌍방 폭행'이라고 판단하였고 두 사람 모두를 폭행죄로 기소하였다.

고교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친구는 공소사실을 극렬히 부인하며 gaps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판 결과를 막을 요량으로 위증을 한 gaps의 '새빨간' 거짓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비록 gaps는 우정을 지켰으나, 진실은 가려졌고 취객은 억울하게 되었다.

사실관계를 밝혀 범인을 처벌하는 책무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있음에도 gaps의 증언이 거짓이나 신빙성이 없다고 탄핵하지 못한 검사와 위증을 믿은 재판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는 gaps의 경우와 같이 '새빨간' 거짓말에 의하여 진실이 불거지고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수사를 통해 법정 위증을 단죄함으로써 사실왜곡을 바로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 구제이므로 사실왜곡을 예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gaps의 최초 진술 및 진술 반복경위에 대한 상식에 부합하는 평가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진실왜곡을 예방하는 데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또 이 같은 범조인의 부당한 노력에 더하여, 국민들 역시 범치국가의 주인으로서 진실발견을 방해하지 않을 성숙한 범치의식이 필요한 대목이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기고

노희용



그동안 흔적만 남겼던 수달이 광주천에 모습을 드러냈다.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이 도심 하천인 광주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도심 하천에서 수달이 발견된 것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사례일 것이다.

광주시는 광주천을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사업비 689억 원을 투자해 추진해왔고, 지난해 말 비로소 완공했다. 그 결과 동구 선교동에서 서구 유촌동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광주천 18.2km와 광주천 합류지점에서 동구 속실마을까지 증심사천 0.95km를 포함한 19.15km의 구간

것이다. 이번 수달이 발견된 곳도 수심이 깊어 불어나 잉어 등 먹이감이 많은 곳이다. 수달은 후각이 발달해 냄새로 물고기의 존재를 알아차릴 정도로 수질 오염에 민감한 동물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영산강, 황룡강 등 깨끗한 환경에서만 서식하고 있다고 하며, 이제 광주천 종류도 이 서식 목록에 당연히 이름을 올릴 것이다. 광주천에 수달이 살고 있다는 사실은 따라서 광주시의 환경개선 및 환경보호정책으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물인 것이다.

광주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노력은 비단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

### 광주천 생태복원의 상징 '수달'

에 맑은 물이 흐르게 됐고, 시민들은 '천수공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성과는 광주천 종류의 수질에 대한 사후환경조사사용역에서 과거 5등급이던 수질이 3등급으로 개선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6년 전 393종이던 서식 동식물이 620여 종으로 급증하고 환경부 지정 보호종인 새매, 말뚝가리, 황조롱이, 소쩍새 등도 관찰됐다고 한다.

광주시는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핵심을 수질개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광주천 수질과 유량을 꼼꼼하게 조사하는 것은 물론, 광주천 정 위증을 단죄함으로써 사실왜곡을 바로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 구제이므로 사실왜곡을 예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또 하수처리장에서 재처리한 물 10만t을 다시 상류에서 흘러 보내는 등 하루 14만3천t의 '깨끗한 물'을 광주천에 방류했다. 깨끗한 물로 광주천의 수심이 깊어졌고, 이로 인해 다양한 수생 동식물들이 광주천으로 돌아오게 된

사업'뿐만이 아니다. 이미 2005년부터 1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이 시작됐고, 수백만 명의 탐방객이 찾고 있는 무등산의 옛길 복원과 증심사지구 자연환경 복원사업 등을 통해 광주가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생태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광주천에는 사시사철 깨끗한 물이 흐르고 도심 곳곳에 심어진 나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늘이 큰 나무가 될 것이다. 광주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광주시는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시민과 기업, 단체 등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광주 만들기에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도 꾸준히 마련하고 제시할 예정이다.

광주천에 살고 있는 수달은 '산소 같은 광주'에 살고 있는 우리의 보물이다. 광주시는 이 보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올 봄에는 광주천에서 유유히 자택질을 하는 귀엽고 앙증맞은 수달의 모습이 자주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시 공보관〉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浩		논설주간 申浩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